

시론

대학이 지역과 국가의 성장엔진이 되려면?



주정민 전남대 대학원장

한국의 대학은 단순한 인재 양성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핵심 기관이다. 고등교육을 통해 길러진 고급 인재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해 높은 생산성과 혁신 역량을 발휘하며,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선진국 대부분은 우수한 대학을 바탕으로 산업과 사회 발전을 이뤄왔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눈발이 팔아 자녀를 대학에 보냈던 부모 세대의 교육 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학교육의 열기는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2023년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7-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셈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성장률은 2000년 9%대를 넘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에는 1%대까지 떨어졌다.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2-4위권에 들 만큼 높음에도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하락세에 접어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대학 진학률만 높다고 국가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학의 양적 팽창이 곧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대학 수는 급속히 늘었지만, QS, THE 등 세계 대학평가에서 우리 대학들의 순위는 일부를 제외하고 정체 상태이거나 하락세다. 반면, 중국과 싱가포르 등 경쟁 국가 대학들은 꾸준히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학생수와 대학 수는 늘었으나, 교육과 연구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학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 유치와 함께, 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15.6조 원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15.1%에 불과하다. 별도 편성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16.4조 원이지만, 이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71%로, OECD 평균(1.1%)에 크게 못 미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OECD 평균의 66% 수준에 머물러 최하위권이다. OECD 회원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과 콜롬비아 뿐이다.

최근 대학들은 학생인구 감소와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대학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곳도 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면 대학 운영비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결국 등록금 인상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학 재정 부족으로 교육 프로그램 축소, 시설투자 저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이 지자체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발전 저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혁신의 동력인 대학이 지역산업과 인재 양성의 허브가 되려면,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1971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초·중·고교육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 것처럼, 고등교육에도 별도의 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고등교육 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크다.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연장 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

대학의 질적 성장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재정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은 다시 지역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다.

기고

대통령의 과학·환경·에너지·지역균형 정책 주목한다



허민 前 전남대 부총장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생존과 번영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담대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과학 기술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생태 전환을 양대 축으로 삼고, 과학·환경·에너지 정책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놓고 있다.

과학기술, 생존 경쟁의 최전선

이재명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빅데이터,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국산 거대언어 모델(LLM) 개발은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미래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다.

환경정책,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국가적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제안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기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개편이다.

또한, 2000년까지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황 조정,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기후 대응에 따른 산업 변화 속에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는 포괄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성과 균형의 조화

이재명 정부는 친환경성, 안정성, 경제성이 세 요소를 조화시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 청정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 지역에는 반드시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이 연계되어야 하며, 생산된 에너지는 1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잉여분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거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불신을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 지역에는 반드시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이 들어와야 하며, 이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그 이후 남은 전력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으로 수송·유통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전력 균형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 순환 모델을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핵심적이다.

또한, 전국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 전력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사회의 기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단순한 기술·에너지 혁신에 그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천적 철학과 결합돼 있다.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재난에 가깝다. 지방이 살

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 아래, 이재명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조광역 협력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안된 '국민 제2주소 제도'는 획기적이다. 1인 2주소 등록을 허용해 지역 체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일정 조건하에 1가구 2주택 면세 혜택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멸위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인생 2막을 지방에서 준비하려는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

이러한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 간 조율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유의미한 변화이지만, 기존 산업부 및 환경부 등과의 권한 조정과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과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공공 재정의 유연성과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경제 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다.

미래를 여는 통합적 비전

이 대통령의 과학·환경·에너지·지역균형 정책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다. 이 정책들은 시급성과 중요성 면에서 긴급한 과제이며, 실행 가능성과 미래 준비 측면에서도 충분한 근거와 비전을 갖추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력과 사회적 설득력이다. 각각의 지혜와 협력이 더해질 때, 이 정책은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 위기 속에서 길을 내고, 기회를 잡는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社說

준공영제 광주 시내버스 파업에 市가 3자일 수 없다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광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광주시가 비상대책을 수립해 운영률 8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하루 200건의 민원을 접수하며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강기정 시장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준공영제 운용 주체로서 역할해야 할 것이다.

광주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연간 1천4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광주시가 보전하는 적자는 해마다 불고 있다. 2007년 준공영제를 시작했을 때 196억원에서 2020년 들어 1천억원을 돌파해 10배 이상 늘었다. '돈 먹는 하마' 신세다. 광주시의 책임이 막중하고 노조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결국에 막대한 파국을 선택하고 말았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 65세로 정년 연장 등 처음 제시했던 내용을 고수하고, 사측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고, 광주시는 자율에 의한 최적의 협상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비상수

송으로 면피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영 비율을 최대한 높이 유지하고, 지하철 추가 배치를 시행중이라고 해도 한계가 분명하다. 시내버스 1천40대 중 88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사 2천400여명 중 1천400명이 노조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무기한 전면 파업을 막을 수도 있었다. 지난 5월 노조는 현충일 연휴 기간 투쟁을 멈추며 대화제의를 기다린 것이다.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시민들은 폭발 직전이다. 월요일부터 출근, 등굣길 불편이 빚어졌다. 곳곳에서 자각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 안내하는 도착 예정 시간이 달라 혼란스럽다. 80%대 운영률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우려했던 교통 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안주하는 것인지의심이 든다.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마다 천억대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더 머뭇거리선 안 된다. 부당 노동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니, 어불성설이다. 둘러대기 좋은 구실이다.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에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준공영제 체제에서 광주시가 제3자일 수 없다.

학동 붕괴참사 4년 지났어도 책임 규명 등 진행형

광주 학동 붕괴참사 4주기를 맞았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인재였지만 그 날의 참혹한 모습은 이젠 찾아볼 수 없다. 말끔하게 치워진 상태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대법원 판단만 남겨놓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2명만 실형을 받았을 뿐이다. 그것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엔 면죄부를 줬다.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은 허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비극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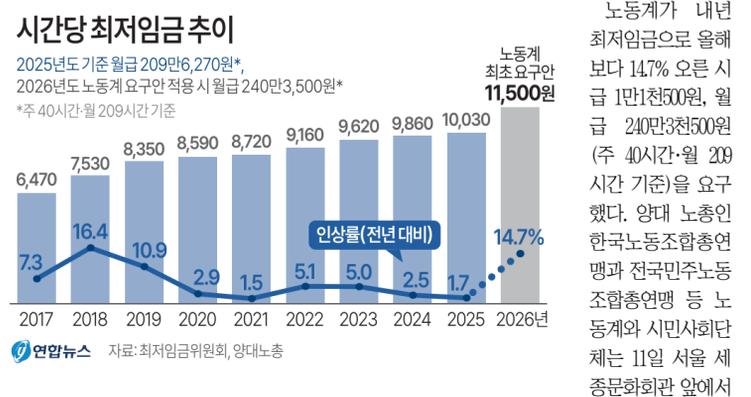
이의를 우선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다. 피해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독립적 기구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을 담야 국가가 책

임지고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를 새 정부와 국회에 거듭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을 시민의 권리로 여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현산은 반복되는 항소와 가치분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덧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법적 책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약속했던 추모 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 유가족이 요청한 사고 버스 운임5만 원구 보전 역시 어디에 둘 것인지 광주시와 합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올해도 피해자들은 참담한 슬픔을 애써 억누르며 애도했다. 하지만 위로와 회복을 위한 어떤 방안도 없이 수수방관하는 냉담한 현실에 분노가 터진다.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묻는다. 현산, 광주시, 동구청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똑같은 참사는 꼭 막아야 한다.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기억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5주기부터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길 바란다.

그래픽 뉴스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한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가구별 적정생계비와 근로소득 부분(총 생계비의 82.5%)을 산출하고, 경기침체·환율 급등·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범위를 전년 대비 7.8%~26.9% 인상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5년간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인 11.8%와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평균 하락률인 2.9%를 더한 14.7%를 채택했다. 노동계는 작년엔 27.8% 오른 시급 1만2천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스토킹, '관심' 아닌 '범죄'... 단호한 사회적 대응 절실



스토킹 범죄와 이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스토킹을 단순한 집착이나 과도한 관심 표현, 혹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스토킹은 더 이상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문자, 전화, 주거지 주변 배회 등 일상적 괴롭힘으로 시작된 스토킹은 종종 신체적 위협과 함께 극단적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된다. 경찰은 초기 단계부터 스토킹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강력하게 개입해야 하며, 사법부는 엄중

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시민 모두가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스토킹은 '관심'이 아닌 '범죄'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철우·담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 | | |
|--------------|-------------------|-----------------|--------------|
| 편집부 650-2090 | 지역특집부 650-2060 | 광고문의 650-2099 | FAX |
| 정치부 650-2030 | 사 진 부 650-2080 | 마케팅본부 650-2070 | 광고국 650-2016 |
| 경제부 650-2050 | 논 설 실 650-2006 | 경영지원국 650-2011 | 편집국 650-2017 |
| 사회부 650-2040 | T V 본 부 650-2009 | 사업 본 부 650-2007 | 입부국 650-2019 |
| 문체부 650-2065 | 서울지사(02) 786-9488 | 업 무 국 650-2020 |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